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¹⁾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Social Cohesion

정해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한국 사회 사회이동성의 실제와 인식을 비교하고 정책적 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객관적 이동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식적 차원에서 이동성 인식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부모 세대의 영향력,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인식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빠진 이동성 인식이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펼쳤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 목표 외에도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들어가며

사회이동성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사회통합의 한 요소이다. 여유진 외(2015)는 “교육 성취와 숙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 어떤 산업화된 나라보다도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 왔다고 믿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미래 경로가 상당 정도 결정된다고 믿는 현세대의 좌절은 사회통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라고 보고서의 머리말을 띄운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이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한국의 객관적인 사회이동성 수준

1) 이 글은 김문길 등(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의 제5장을 포럼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여유진 외 (2015)에서도 최근 세대로 오면서 학력과 직업 계층의 대물림이 강화됨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의 이동성이 평균적인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이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정서적 지지와 달리 실제로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이동성이 저하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확대되면서 사회구조의 정상 기능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사회통합은 저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구조의 정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과거와 같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것만을 사회이동이라고 한다면 산업구조의 정착에 따라 이러한 사회이동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추격 경제하의 급속한 산업구조 변동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상향 이동이 가능했던 상황과 현재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계층 질서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계층의 위계가 계층 질서 이외의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계층의 형성 과정도 공평해야 한다. ‘공평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게 한다(여유진 외, 2015, p. 137). 이러한 사회는 이동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과 결과가 바로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가

사회통합의 세 축을 설정하는 데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이동을 포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정책도 사회이동성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중장기 전략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이동성 종합지표 마련 및 정기적 공표, 주요 정책의 사회이동성 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 대응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2017). 이때 사회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향은 대체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이동성 제약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이동성의 저하가 상층(또는 최상층)으로의 이동 가능성 저하에 있다고 한다면 정책과의 불일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이동성의 저하는 상층(최상층) 진입에서 경험하는 불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뚜렷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한국인의 사회이동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사회이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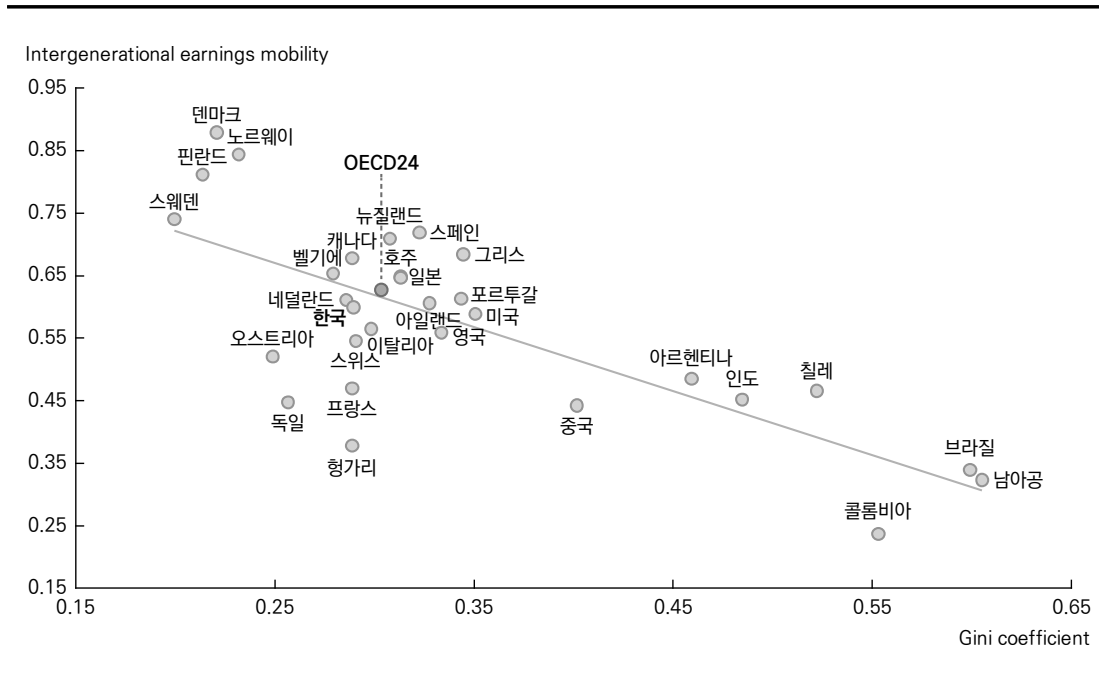
사회이동성은 계급, 직업, 소득과 부로 구분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위계 내에서 이뤄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것이 한 개인의 생애(한 세대) 안에서 이뤄지면 세대 내 사회이동이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및 그 이상의 관계(두 세대 이상)에서 이뤄진다면 세대 간 사회이동이다.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사회는 상층으로의 이동도 빈번하지만, 동시에 하층으로의 이동도 많은 인구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이동성은 효율의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

다. 높은 불평등 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들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교육 접근성에서 사회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초기 개입 등의 필요가 여기서 나온다. 한편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힘으로 충분히 계층 이동이 가능한 낮은 격차의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다시 효율적인 교육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낮은 격차 사회의 모습을 그려 보도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 p. 26)는 현

그림 1.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성



자료: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 196. Paris: OECD Publishing.

재의 세대 간 불평등 수준에서는 소득 하위 10%에 속한 가구의 후손이 사회이동을 통해 사회의 평균 소득 수준에 이르는 데 4세대 또는 5세대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성이다. 이 값은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소득탄력성을 1에서 뺀 값이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이동성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0.75를 넘어선다. 반대로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동성 값이 0.35 이하이다. 한국은 Kim(2017)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0.60의 값을 보이고 있다. 분석에 포함된 OECD 24개국의 평균값은 0.63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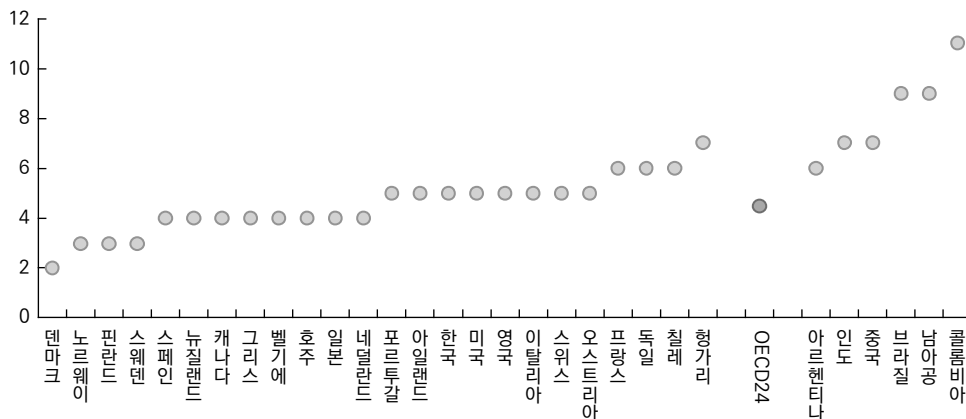
낮다.

둘째는 현존하는 소득불평등의 정도이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하위 10% 집단의 소득과 평균 소득의 비율은 1:3.5를 보이고, 지니계수는 0.30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0.29 정도의 값을 보이는데, 분석에 포함된 OECD 24개국 중에서 12위에 해당한다.

그런 결과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후손이 평균 소득 수준에 이르기 위한 기간은 낮은 소득불평등과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사회에서는 4세대가 필요하지만, 높은 불평등과 낮은 이동성의 사회에서는 9세대 이상이 필요하다(OECD, 2018, p. 27). OECD 국가 평균적으로는 4.5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

그림 2.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세대 간 사회이동성

(단위: 세대)



주: 아버지(father)와 아들(son) 간의 소득탄력성과 하위 10% 소득과 평균 소득 간의 소득비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자료: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 27. Paris: OECD Publishing.

리나라는 5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계산한 방식의 세대 간 이동성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이동성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그런데 전자의 조건인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이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데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원의 불공평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은 그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동성의 측정은 세대 간 직업계층 이동이라 할 것이다. 소득계층은 항상 어느 시점에서나 사회 전체의 집단이 균분되지만, 직업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 절대적 직업계층 이동은 높은 편인데, 남유럽의 60~63% 수준에 비해 한국은 72~74%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ECD, 2018, p. 183). 한편 호주를 제외하면 세대 간 직업계층의 상향 이동이 보다 일반적이다. 한국은 상향 이동이 더 많고 하향 이동이 더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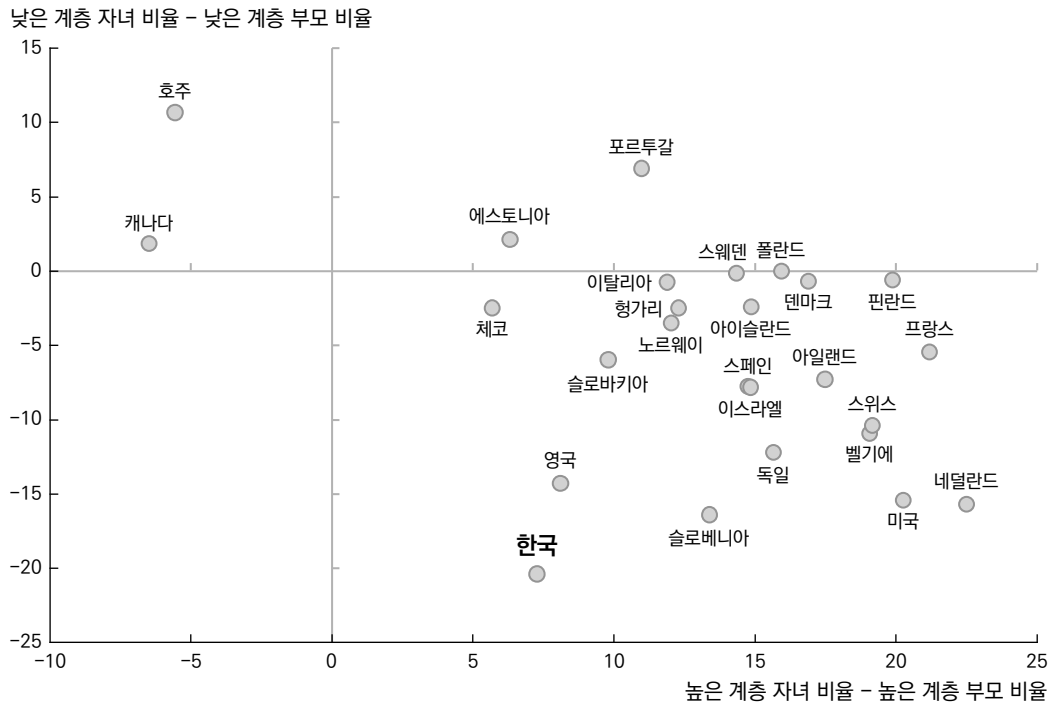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러한 이동성은 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높은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던 사무직, 관리직 직업의 규모 증가가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다

음 [그림 3]은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낮은 계층 자녀의 비율과 낮은 계층 부모의 비율 간의 차이, 높은 계층 자녀의 비율과 높은 계층 부모의 비율 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자녀 세대의 직업계층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그들 부모의 직업계층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보다 높다면 그 사회에서는 직업계층의 전반적인 하향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인의 직업계층이 상위 계층에 있다고 응답한 자녀 비율과 부모의 직업이 상층에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7.3% 수준이고, 반대로 본인의 직업계층이 하층에 있다고 응답한 자녀 비율과 부모의 직업이 하층에 있었다고 응답한 자녀 비율의 차이가 -20.4%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하위 직업계층은 줄어들고, 상위 직업계층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 사회의 직업계층 이동성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 사회의 직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이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Eurofound(2017)는 1945년 이전 출생자, 1946~1964년 출생자, 1965~1974년 출생자 간에 사회이동성이 높아진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하였다(OECD, 2018, p. 190에서 재인용).

그림 3. 부모의 직업계층에 따른 비율

(단위: %)



자료: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 184. Paris: OECD Publishing.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대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조귀동(2020)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번듯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때의 번듯한 일자리는 월급여 3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전체 고졸 이상 20대 취업자의 11.4% 정도에 그치며, 전체 취업자의 그 비율이 16.5%인 것에 비하면 20대가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논쟁은 20대를 과도기로 상정하면서 이동해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는지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이동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이동성에서, 소득 상관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공정한가? 그리하여 결국에는 소득 상관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

리 국민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의문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3. 우리 국민의 사회이동성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진행한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는 사회이동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외에도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표 1〉에서는 세대 내 사회이동성 인식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

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고, 우리 국민의 47.3%가량은 높다(매우 높다+약간 높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에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력으로 보면 중졸 이하 학력에 비해 대졸 이상 학력에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일수록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어서 〈표 2〉는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7.2%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때 긍정적 응답은 소득계층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소계
사례 수		55	1,784	1,448	473	129	3,889
비율		1.4	45.87	37.24	12.16	3.32	100
소득계층	하층	1.61	30.54	42.27	22.22	3.36	100
	중하층	0.84	39.42	42.05	14.25	3.44	100
	중간층	1.69	52.88	33.45	8.65	3.34	100
	중상층(상층)	2.31	65.17	25.43	4.77	2.32	100
학력	중졸 이하	1.16	34.92	44.69	16.17	3.06	100
	고졸	1.55	42.33	40.49	12.46	3.17	100
	대졸 이상	1.35	52.79	31.73	10.57	3.55	100
연령	20대 이하	2.74	49.15	35.59	7.79	4.73	100
	30대	1.06	49.97	33.22	13.04	2.71	100
	40대	0.55	44.73	38	12.81	3.92	100
	50대	1.29	46.41	37.6	13.03	1.67	100
	60대 이상	1.47	39.79	41.22	13.84	3.69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표 2.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소계
사례수		56	2,171	1,112	221	329	3,889
비율		1.43	55.82	28.59	5.68	8.47	100
소득계층	하층	1.03	40.72	40.35	9.12	8.78	100
	중하층	1.15	55.03	27.8	6.93	9.09	100
	중간층	1.61	59.23	26.79	3.98	8.39	100
	중상층(상층)	2.79	66.83	22.42	3.65	4.31	100
학력	중졸 이하	0.5	51.71	33.97	7.58	6.24	100
	고졸	1.26	54.02	30.45	5.08	9.2	100
	대졸 이상	1.9	58.88	25.08	5.63	8.51	100
연령	20대 이하	1.64	54.41	27.73	4.1	12.12	100
	30대	1.67	56.87	28.09	5.4	7.96	100
	40대	1.64	59.59	25.2	4.1	9.46	100
	50대	1.7	57.56	26.94	6.35	7.45	100
	60대 이상	0.54	50.6	34.96	8.27	5.63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나. 부모 세대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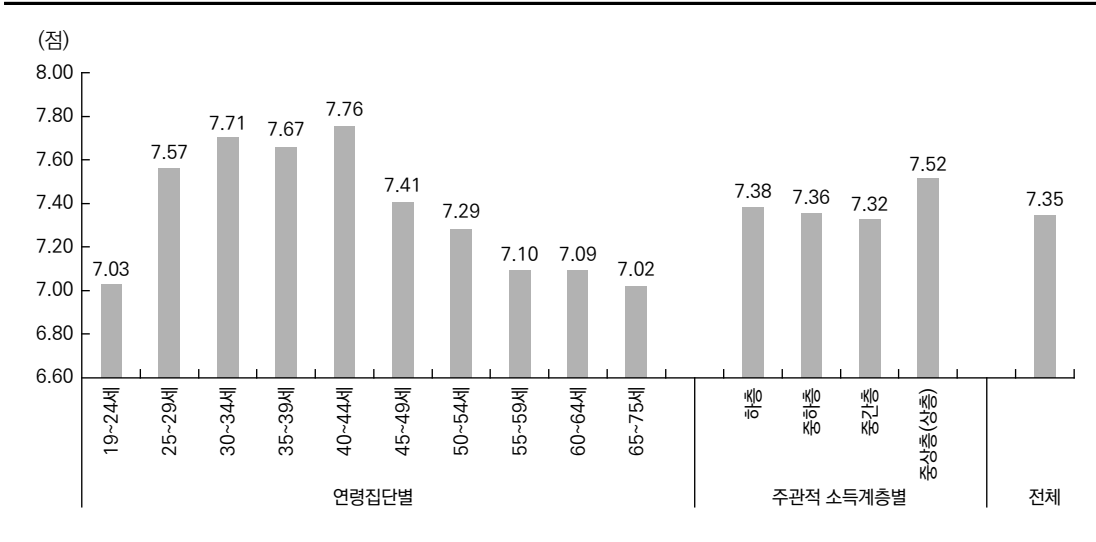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문항은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다음 [그림 4]의 왼쪽은 연령대별로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완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10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균 7.35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우리 국민이 부모의 소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30~34세 집단은

7.71점, 35~39세 집단은 7.67점, 40~44세 집단은 7.76점, 45~49세 집단은 7.41점으로 소득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연령대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의 오른쪽은 이런 인식을 주관적 소득 계층과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일수록 그 영향력을 낮게 보고 있으며, 오히려 상층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 세대로의 소득에 따른 영향력이 오히려 상층부 계층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4. 자녀 세대의 소득에 부모 세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인식-연령집단 및 주관적 소득계층별 소득계층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다.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이동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정성과 관련된다. 사회이동성은 동등한 기회 보장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이다(Nunn, 2012, p. 27). 기회의 공식적인 공평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집단도 차별받지 않아 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공식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 가구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가지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증진을 위한 정책 패키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강한 신뢰와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

(OECD, 2015, p. 16). 이것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원인에는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해 그 하위 항목으로 ① 두뇌(능력)에 비해, ② 일과 관련한 기술에 비해, ③ 노력에 비해, ④ 학력에 비해, ⑤ 경력에 비해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① 교육 기회, ② 취

표 3. 사회의 대우에 대한 공정성 인식

(단위: %)

	학력에 비해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공정하다	1.58	2.75	1.29	1.44	1.21	1.31
약간 공정하다	27.95	31.22	34.93	26.2	28.28	20.17
보통이다	51.93	48.04	47.63	51.48	53.18	58.5
약간 불공정하다	16.89	15.83	15.01	19.67	15.42	18.28
매우 불공정하다	1.64	2.15	1.15	1.21	1.91	1.74
	능력에 비해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공정하다	1.55	2.17	1.2	0.84	2.22	1.33
약간 공정하다	31.12	35.13	36.29	31.88	30.79	22.4
보통이다	51.06	49.31	48.5	50.47	50.68	55.96
약간 불공정하다	15.61	12.73	13.71	16.67	15.48	19.04
매우 불공정하다	0.65	0.66	0.3	0.14	0.83	1.27
	노력에 비해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공정하다	2.01	2.56	3.73	1.33	0.88	1.82
약간 공정하다	23.46	23.51	26.59	21.05	29.37	16.95
보통이다	44.61	47.62	42.16	47.65	40.02	45.7
약간 불공정하다	27.37	24.24	25.28	27.97	27	31.9
매우 불공정하다	2.55	2.07	2.24	2	2.72	3.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업 기회, ③ 승진·승급 기회의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에서 느끼는 공정성,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3>과 같다. 학력에 비한 대우, 능력에 비한 대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인식('매우 공정하다'와 '약간 공정하다'의 합)이 30% 내외이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와 '약간 불공정하다'의 합)가 16~18% 수준이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공정하다는 인식은 25.5%로 낮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29.9%로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특히 노력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고령층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 확인하는 <표 4>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및 승진·승급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한지, 불평등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령집단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58.9%에 이르고 있다. 취업 기회에서는 24.8%만이, 승

표 4. 연령집단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교육 기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평등하다	5.7	8.5	5.2	5.5	4.7	4.9
대체로 평등하다	51.2	48.2	56.6	51.5	49.7	50.3
보통이다	27.9	29.4	24.3	27.7	30.7	27.2
대체로 불평등하다	14.2	12.0	13.0	14.4	14.2	17.3
매우 불평등하다	0.9	2.0	0.9	0.9	0.8	0.4
	취업 기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평등하다	1.7	1.5	1.7	1.4	2.2	1.5
대체로 평등하다	23.1	21.0	22.5	27.9	23.3	20.6
보통이다	38.1	41.3	42.1	34.6	39.3	34.0
대체로 불평등하다	33.1	31.9	30.0	32.6	29.9	40.6
매우 불평등하다	4.0	4.4	3.8	3.4	5.3	3.3
	승진·승급 기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평등하다	0.7	0.3	0.5	0.2	2.2	0.2
대체로 평등하다	15.8	18.5	14.4	14.6	17.3	14.3
보통이다	40.6	39.9	42.8	42.3	37.4	40.8
대체로 불평등하다	39.5	37.9	37.6	39.4	40.0	42.3
매우 불평등하다	3.4	3.4	4.7	3.4	3.2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진·승급 기회에서는 16.5%만이 평등하다(‘매우 평등하다’와 ‘대체로 평등하다’의 합)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기회의 평등에서 교육의 기회 확장은 이뤄 냈지만, 이것이 그 이후의 경제활동 단계에서는 아직 평등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 기회에서는 19~29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평등하다는 인식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기회의 평등 인식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계층집단이다. 한국 사회의 이동성에 대한 인식

에서는 세대, 연령집단보다는 계층집단에서 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기회의 평등함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특히 계층 구분에서 중상층(상층 포함) 집단에서는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응답이 7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기회에서도 하층은 15.9%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하는 데 비해 중간층은 27.8%, 중상층(상층 포함)은 33.9%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승진·승급 기회에서는 하층은 12.4%

표 5. 계층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기회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매우 평등하다	5.7	4.4	5.4	6.2	7.1
대체로 평등하다	51.2	44.5	49.3	52.8	65.3
보통이다	27.9	29.9	30.4	26.9	16.2
대체로 불평등하다	14.2	19.9	14.1	13.3	10.9
매우 불평등하다	0.9	1.4	0.9	0.9	0.6
	취업 기회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매우 평등하다	1.7	2.3	0.8	1.6	6.5
대체로 평등하다	23.1	13.6	21.8	26.2	27.4
보통이다	38.1	36.9	39.3	37.1	41.3
대체로 불평등하다	33.1	40.5	33.5	31.9	22.9
매우 불평등하다	4.0	6.7	4.6	3.1	1.9
	승진·승급 기회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매우 평등하다	0.7	1.1	0.2	0.5	5.5
대체로 평등하다	15.8	11.3	14.3	17.1	25.3
보통이다	40.6	36.0	40.1	43.1	33.5
대체로 불평등하다	39.5	47.3	41.2	36.6	34.7
매우 불평등하다	3.4	4.2	4.2	2.8	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중상층(상층 포함)에서는 30.8%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4.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이제 사회이동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사회통합 연구에서 사회이동성을 살펴보는 이유의 핵심은 사회이

동성이 객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차원에서도 사회통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성의 실질적 수준 확보와 더불어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 정도를 설명하는 데 사회이동 인식을 변수로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사회통합 인식은 0점부터 10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응답

표 6. 사회이동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초 모형	(모형 1) A. 세대 내 이동성 투입	(모형 2) B. 세대 내 이동성 투입	(모형 3) C. 노력에 대한 대우의 공정성 투입	(모형 4) A & C 투입	(모형 5) B & C 투입	
빈곤 여부(비빈곤=0)	-0.155**	-0.095	-0.115*	-0.142*	-0.092	-0.107	
성별(남성=0)	0.065*	0.061	0.056	0.074*	0.069*	0.064*	
연령층 (20대=0)	30대	-0.062	-0.042	-0.068	-0.060	-0.044	-0.067
	40대	-0.113*	-0.088	-0.124*	-0.100	-0.082	-0.111*
	50대	-0.141**	-0.131*	-0.149**	-0.143**	-0.135**	-0.152**
	60대 이상	-0.230***	-0.226***	-0.232***	-0.223***	-0.221***	-0.2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206***	-0.214***	-0.196***	-0.217***	-0.221***	-0.208***
	대졸 이상	-0.160*	-0.189**	-0.156*	-0.194**	-0.209**	-0.188**
A. 세대 내 사회이동성 인식 (매우 낮다=0)	매우 높다 또는 높다		0.427***			0.371***	
	약간 낮다		0.290***			0.264***	
	모르겠다		0.031			-0.009	
B.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 (매우 낮다=0)	매우 높아질 것이다 또는 약간 높아질 것이다			0.358***			0.317***
	약간 낮아질 것이다			0.220**			0.198**
	모르겠다			0.011			-0.023
C. 노력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				-0.135***	-0.106***	-0.124***	
상수	2.769***	2.459***	2.500***	3.190	2.825	2.921	
N	3889	3889	3889	3889	3889	3889	
Adj R-Sq	0.0063	0.0252	0.0199	0.0178	0.0319	0.0294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빈도를 고려하여 모두 5개 그룹(0~2점, 3~4점, 5점, 6~7점, 8~10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먼저 빈곤 가구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50대, 60대 이상 집단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수준이 높아도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보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모형

에 투입하면 설명력이 높아지면서 빈곤 여부와 성별의 유의성은 사라진다. 세대 내 이동성 인식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 비해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 '약간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확인된다. 이와 달리 노력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사회이동성 수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준보다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면 평균 7.35 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소득계층으로 보면 상층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교육의 기회가 제약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집단의 상층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공정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차이 나는 근처에 놓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원인의 일부를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간층-그 중간층을 무엇으로 칭하든 간에-의 사람들이 사회계층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지점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80과 나머지 20의 차이가 매우 커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이동성은 소득 1분위에서 2분위로 이동하는 것들

도 포함하여 모두 이동으로 칭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동이라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의 객관적인 이동성과 인식적 차원에서의 이동성이 괴리를 보이게 된다.

둘째,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성공할 때까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이다. 즉 성공을 갈망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성공한 자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러지 못한 현실과 만나면서 불안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책적으로 하층의 상향 이동을 위한 지원책을 구상해 왔다. 지극히 당연한 정책적 지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더 멀리 있는 위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의 확립이다. 이것이 각 개인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공정성인지, 아니면 크게 노력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인지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우리 국민은 교육과정 이후의 가능성, 즉 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든지 승진, 승급 기회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크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설정해 왔던 기회의 공정성 제공이 교육 기회와 같이 기계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있었으나, 실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

는 그 이상, 교육 과정 이후의 과정에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는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것이다.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소득계층에서 보다 상층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방식 외에도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식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살찐 고양이 법’, 알바노조에서 제안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의 10분의 1로 맞추는 ‘1 대 10 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이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회의 불공평을 줄이는 것 외에도 결과의 평등을 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7).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
 김문길, 김미곤, 정해식, 곽윤경, 우선희, 이정운. (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서울: 생각의 힘.

Kim, S. (2017). Inter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n Korea. *IZA Journal of Development and Migration*. 2017(7), 1-18.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320329> or <http://dx.doi.org/10.2139/ssrn.2320329>

Nunn, A. (2012). Fostering social mobility as a contribution to social cohes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